

영유아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교육서비스를 향하여

이 영 소장

최근 발표된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1.3명을 기록했던 작년 대비 하락하여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같은 출산율의 추락으로 관련 재정 투자 효과에 대한 의문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여성고용율은 53.9%로 OECD 평균인 57.2%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보육 관련 예산이 5조 2738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5조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왜 여전히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출산에 냉담한 것일까?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 중단 사유는 ‘믿고 맡길 데가 없음’으로 해당 응답률은 48.7%로 가장 높고, 민간 인프라에 대한 불만으로 국공립시설 쓸림 현상은 여전하여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이 있는 부모 중 실제 대기 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9.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관보육 이외에도 자녀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는 제도 활용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약 3.3%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육아휴직 사용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제도 인지도 조차 낮아 2013년 기준으로 736명이 이용한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무상보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대표적으로 특별활동비의 증가나 사교육비 증가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2월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본격 출범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이 단순한 관리부처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시설 다양성 등을 추구하여 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6~7월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시설 및 교사 간 격차 축소, 시설 다양성 유지, 접근성 좋은 시설, 0~2세 유치원 이용 허용 등을 유보통합의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유보통합추진단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원비와 교육프로그램 교사, 급식, 통학 차량 등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통합정보 포털에서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회계 규칙 전용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사 쳐우 개선 등을 주된 과제로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모들의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유아교육과 보육학계는 물론 일선 현장 관련 단체 등 현장 관계자들의 오랜 갈등과 반목이 주된 걸림돌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둘러싼 정책 결정자는 물론 관련자들은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영유아와 부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급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이나 관련 학계의 세력 확장용 수단 또는 정치적 실직용이 아니라 영유아와 부모들의 권리 보장이 주된 목표이다. 다시 말해 태생과 무관하게 영유아들은 출발선 평등을 보장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출산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에 맘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유보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아동과 부모들이 모두 행복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를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이 보람차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